

국제법(국제통상)

2012년 시행 5급[행정] 공채 제2차시험

응시번호 :

성명 :

제 1 문. 신흥공업국 A국은 산업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자국 기업이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민간은행에 대하여 연 2%의 이자율로 기업에 대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민간은행은 자국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연 7~10%의 이자율을 적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시에 따라 연 2%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기업에 대출을 하였다. 민간은행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하여 연 2%의 이자율로 대출한 결과, 총 100개의 A국 기업이 대출을 받았는데 총 대출금의 50%가 철강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출되었다. (A국의 국내 총생산 중 철강산업은 10%를 점한다) A국에서 철강제품을 수입하는 B국은 A국 철강제품에 대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려고 한다. A국과 B국은 WTO 회원국이다. (총 40점)

- 1) A국에서 수입하는 철강제품에 대하여 B국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A국의 보조금이 존재하는지를 설명하시오. (20점)
- 2) B국 조사당국으로부터 상계관세 조사를 받은 A국은 대출프로그램이 WTO 보조금협정상 보조금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자국산 철강제품에 대하여 상계관세가 부과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A국 주장의 근거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 3) 만약 WTO 회원국인 C국이 A국의 대출프로그램으로 인해 자국 국내산업에 심각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면, C국이 WTO협정상 활용할 수 있는 구제조치는 무엇인가? (10점)

제 2 문. A국과 B국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당사국이다. A국 주재 B국 대사관과 관련된 다음 사건에 대하여 답하시오. (총 30점)

- 1) B국 대사관은 대사관저로 사용하기 위하여 A국 국민 甲소유의 집을 5년간 월 임대료 5,000 USD로 임대하였다. 그런데 B국 대사관은 주택 임대 후 1년이 지나 임대료 지급을 3개월간 연체하였다. 이에 甲은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계약조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계약 해지 후에도 B국 대사관은 주택을 명도하지 않아 甲은 주택의 명도를 요구하는 주택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甲의 주택명도청구소송은 허용되는가? (10점)
- 2) A국이 도심의 교통혼잡에 대한 조치로 왕복 4차선인 도심의 도로를 양쪽으로 2차선씩 확장하여 왕복 8차선으로 확장하기로 하였다. 이 계획에 의하면 많은 A국 국민과 외국인 소유의 토지를 수용해야 함은 물론이고 B국 소유의 B국 외교공관 부지 500 m²중 200 m²도 수용해야 한다. A국은 B국 소유의 B국 외교공관 부지를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강제수용할 수 있는가? (10점)
- 3) B국 대사관에 민주화운동을 하던 반정부인사 乙이 피신하였다. 乙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A국 사법경찰관이 乙의 인도를 B국 대사관에 요청하였다. 이에 B국 대사관은 乙의 인도를 거부하면서 乙을 제3국인 C국으로 망명시키고자 하니 乙이 대사관 밖으로 나가더라도 체포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라고 요구하였다. B국 대사관의 이러한 행위는 적법한가? (10점)

제 3 문. 2002년 10월 5일, A국 내 모 지역에 체류 중이던 B국 국적의 사람들 수백 명이 외국인에 대한 고용 차별에 반발하여 집단 시위를 하던 중, 신원 미상의 청년들에 의하여 구타와 폭행을 당하여 2명이 숨지고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은 즉각 출동하지 않았으며, 상황이 종료될 무렵에 현장에 도착하여 교통정리를 한 것이 전부였다. 후일 확인된 바에 의하면, 이들 청년들 중 일부는 이들 외국인에게 악감정을 갖고 있던 시민들이었으며, 또 다른 일부는 관할 경찰당국으로부터 수당을 받고 시위 진압을 목적으로 투입된 자들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A국은, 시민들과 관련하여서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안전 조치를 모두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질서를 유지할 수 없었다고 하였고, 이어서 시위 진압을 목적으로 투입된 자들과 관련하여서는 그들에게 물리적 수단은 사용하지 말도록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시를 위반하여 행동하였으므로, 이들 모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질 수 없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하였다.

위의 사실 관계를 전제로 국가책임법상 시민들과 경찰당국의 지시로 투입된 자들의 행위가 A국에게 귀속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시오. (30점)

행정안전부 시험출제과장